

# 북·중·러 협력 강화, 북한 위협 변화 대응방향 모색

합참, 하반기 정책자문위 전체회의  
첨단 군사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8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2025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안보·외교, 정책·전략, 정보·작전, 전력, 과학기술 및 정책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20여 명과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은 △북·중·러 협력 강화에 따른 우리 군 대응방향 △최근 북한 위협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 군사역량 강화방안 등 국방·군사현안과 관련해 합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핵·상용무력 병진 정책에 대비해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에 진력하며, 흔들림 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언을 바탕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에게 신



합동참모본부가 18일 개최한 2025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의철 한국국방연구원(KIDA) 객원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뢰받는 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 미래를 준비하는 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지난 1년간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에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

다. 또 군과 합참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김해령 기자

## 국방 분야 우수·혁신제품 현장 도입 빨라진다

국방부, 지정제도 신설 내년부터 시행  
최저가 낙찰 중심 계약제도 한계 극복

우리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을 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기업은 국방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국방력 강화를 뒷받침할 혁신적 기술·제품의 발굴·조달을 위한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부처로 지정됐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 특화된 제품을 직접 정

하고, 우수·혁신제품을 신속하게 도입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동안 군이 우수성을 인정한 기술·제품이라도 현장 도입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저가 낙찰 중심 계약제도의 한계 탓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장한 것이 혁신제품 지정제도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혁신제품 지정 절차는 기업이 제안한 기술·제품에 대한 혁신성·공공성 평가로 시작된다. 이후 국방부는 해당 기술·제품을 기

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 의결로 혁신제품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까지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기반한 우수 기술·제품의 적시 확보는 국방력 강화와 국방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 불법 비상계엄 관련 장성 8명 오늘 징계위 열려

국방부 “법·규정 따라 엄정·신속하게”  
군 인적 쇄신·조직 안정 등 종합적 고려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일 개최한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 문책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장성의 징계 절차에 대한 여러 의견을 두고 “징계 절차는 수사와 재판 과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군의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징계위원회 대상에는 광종근·이진우·고현석 중장, 문상호 소장 등이 포함됐다.

정 대변인은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시기에 맞춰 보직 해임과 기소 휴직을 조치한 것도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성은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즉

시 전역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온 상황에서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며 “이에 지난달 13일 중장 인사를 단행했고 법에서 정한 장성 정원 기준 등을 고려해서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령 기자

## 군무원 신분 이해 넓혀 존중·협력하는 문화 조성

상근단, 현역 장교·부사관 대상 교육

육군교육사령부 직할 상무대군무지원단(상근단)이 현역 장교·부사관들에게 군무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상근단은 17일부터 18일까지 장교·부사관을 대상으로 ‘군무원 신분 이해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상근단 내 군무원 인원수가 장교·부사관보다 많은 조직 특성을 고

려, “현역 간부의 군무원 이해도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허정(대령) 단장의 제언에 따라 이뤄졌다.

군무원들은 그동안 상무대 내 각 병과학교 업무를 지원하면서 군 조직 이해 교육을 받아왔다. 하지만 장교·부사관이 군무원 제도와 신분 특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상근단은 모든 현역 장교·부사관을 A·B조로 편성해 교육에 나섰다. 강사로 나선

김성일(군무사무관) 정보체계지원실장은 △군무원의 법적 신분·역할·처우 △현역과 군무원 간 협업 구조 △상호 예절과 윤리 △효율적 소통 방법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경원(소령) 운영과장은 “군무원 제도와 근무환경, 처우, 복지 등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며 “군무원들과 협업 방향을 다시 생각할 기회도 됐다”고 말했다.

교육을 주관한 하승용(군무서기관) 콘텐츠제작센터장은 “현역과 군무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군 조직문화가 꽃피길 기대한다”며 “장교·부사관 임관 과정부터 이러한 교육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상무대군무지원단 김성일(군무사무관) 정보체계지원실장이 18일 장교·부사관 대상 군무원 신분 이해 교육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